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11. 7.(화)

##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소비자와 환자 관점의 논의 중요성 공감

- 소비자단체·환자단체 간담회 실시 결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의 접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6일(월)·7일(화) 양일 서울시티타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단체들과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필수의료의 위기가 환자와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 (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정지연 사무총장, (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이사, 이정수 사무총장, 안정희 실행위원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이은영 이사, 안상호 이사,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 김진아 사무국장

4개 단체와의 주요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정원 확충과 함께 양성된 의사인력이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필수·지역의료의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결과·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의 전환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근무여건 개선 등도 함께 논의되었다.

둘째, 국민이 질환의 중증도, 응급 여부 등에 따라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등 다양한 의료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아울러, 경증 환자의 다빈도 응급실 이용,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등에 의해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이 저해되고 있음에 공감하였다. 이에 필요한 곳에 의료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수요자단체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사회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하였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민과 환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며, 추진 과정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소비자 및 환자 단체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당사자인 의료계뿐만 아니라, 의료수요가 높은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의 사회적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한숙 (044-202-2420)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성경 (044-202-2414)

